

보도설명자료 (‘12. 11. 12)

수신 : 지식경제부 등록기자

제목 : 정부, 중간저장시설 건설로 가닥
사실상 반영구적인 저장소 부담
(‘12.11.12., 파이낸셜뉴스)

1. 보도내용

- 파이낸셜뉴스는 정부가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으로 중간저장 시설을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잡고 있으나,
 - 이는 어감상 중간저장시설일뿐 핵물질을 30~50년간 가량 임시보관하는 것으로 사실상 반영구저장이라고 보도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지식경제부 입장

- 사용후핵연료 최종영구처분은 사용후핵연료를 인간생활과 영구히 격리시켜는 것으로 상당한 기간(10만년 이상)의 안전성이 필요
 - 반면 중간저장방식은 통상 수십년 수준의 저장기간을 가지며 저장기간중에 안전관리, 보안 등 전문적인 관리기관에 의해 운영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

<중간저장과 최종처분 비교>

	관리특성	운영기간
중간저장	■ 최종처분 이전까지 일정 기간 저장시설에 보관	■ 통상 50년 이상 * 미국 60년, 스페인 60년, 일본 50년
최종처분	■ 일정기간 관리기간을 거쳐 인간생활과 격리시킴	■ 제도적 관리기간 이후 최종 폐쇄 * 중저준위 처분장 제도적 관리 기간 : 100년

- 전 세계 원전운영국 31개국 가운데 미국, 프랑스, 일본 등 원전 운영 선진국 22개국은 공통적으로 중간저장을 우선적으로 실시함

- 세계적으로도 최종처분 시설 운영 사례가 없어 기술적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영구처분 할 필요는 없음

- 참고로 지식경제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내년에 정부와 독립적인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에 있음

- 공론화위원회는 그간 전문가 그룹과 사회 각층의 논의를 통해 축적된 지식과 정보를 토대로 논의주제를 자유롭게 논의하여 정부에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을 권고할 예정임

※ 관련 문의

지식경제부 방사성폐기물과 김정화 과 장 (02-2110-5531)
남철기 사무관 (02-2110-5536)